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누락하기 쉽지만 챙기면 도울만한 세액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로 지급한 계약예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제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정기나 렌즈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인차한 비용 역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인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화원과 태권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사실이 국제정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제정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인당 200만원이다.

생활비에 허덕이는 은퇴가구

KB금융 경영연구소 2018 골든라이프 보고서 발간 순자산 상위 40%이상 가구 은퇴시 최소생활비 총당 은퇴 준비는 미흡 50대 절반 "경제적 준비 시작 못해"

은퇴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1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 절반 이상은 갖고 있는 재산 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 프연구센터는 3일 '2018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 대비 자산과 재무 준비 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20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내 금융의사결정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 드는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184만원으로 조사됐다.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평균 263만원로 나타났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 상위 40% 이상 가구는 65세 은퇴시 최소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6000만원으로 최대 월 230만원의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104만원에 주택연금 94만원으로 부동산 자산만으로 월 198만원의 소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가구(40~60%)의 순자산은 평균 2억1000만원으로 나타나 노후에 최대 월 140만원의 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소 생활비를 쓰려면 45만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위 40% 이하 가구는 은퇴 이후에도 아예 일을 해야 최소 생활비

확보가 가능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6000만원, 최대 월소득은 91만원에 불과해 최소 생활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현실과 달리 은퇴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가구가 53.7%에 달했고, 은퇴가 시작된 60대와 70대 가구주조차도 각 38.1%, 39.1%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44세로 조사됐다. 은퇴가 임박해서야 뒤늦게 생활비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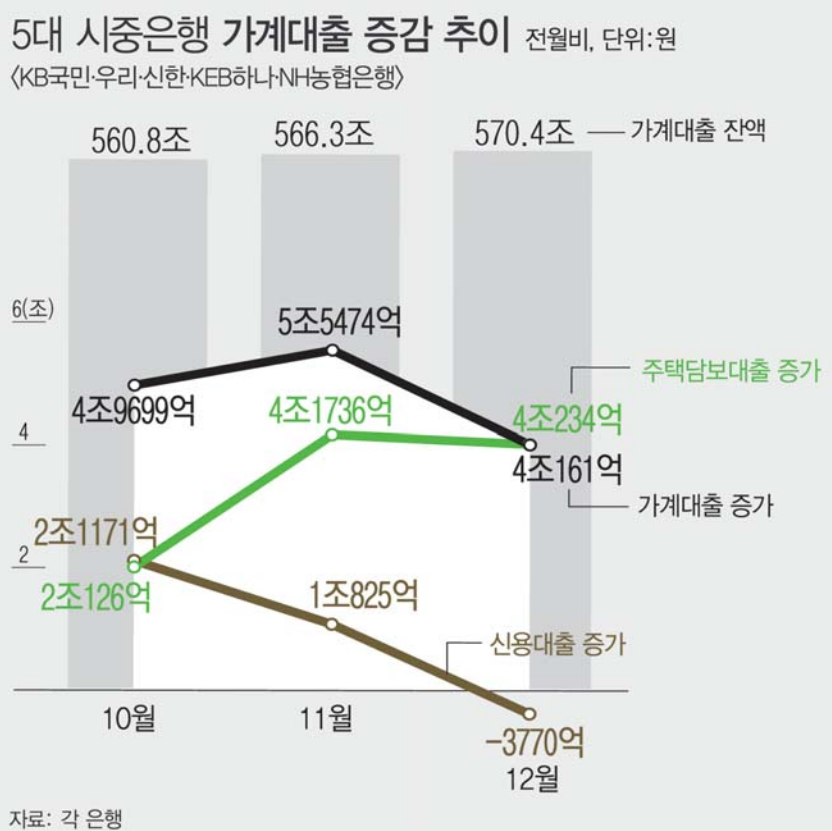
적정 생활비에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를 줄여 배우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생활비 부족시 대처 방안으로 생활비 감소 절약을 꼽은 비중이 전체의 60.4%(3개 복수응답)에 달했고 추가 소득활동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5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축소 매각(25.8%), 예적금 해지(21.8%), 주택연금 가입(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뉴스스



적재 능력 확대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자동차가 3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렉스턴 스포츠의 롱바디 버전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보다 적재함 길이를 31cm 늘리고 적재 능력을 최대 75%까지 확대해 픽업트럭으로서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가계대출 증가세 잡히나...연말 은행권 신용대출 '급감'



지난 연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차츰 둔화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570조 3635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

액(5조5474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으로 지난 9월(3조4379억원) 이후 석달 만에 증가액이 가장 적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린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9322억원으로 전월보다 377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신용대출이 2조1171억원, 1조825억원씩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신용대출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물렸던 수요가 12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405조 1167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34억원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4조1736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4조원대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과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중기청 '찾아가는 지원사업 설명회'

오는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 함께 참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주요 지원 사업 설명회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8일부터 2월15일까지 2019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사업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 각종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설명회는 종합설명회와 창업기업·소상공인 등 정책대상자별 설명회를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22회 진행한다.

올해 광주·전남권 첫 광역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광주시, 전남도, 중진공 신·기보 등이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 따로 마련된 상담 코너에서는 '창업·수출·연구개발(R&D)·자금' 등 분야별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찾아가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